

## 원희연 (전 부산지역정책연구소 기획실장1)) 1차 구술

1. 구술자: 원희연
2. 면담자: 박보영
3. 촬영자: 권용협
4. 구술일자: 2011년 11월 3일
5. 구술장소: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산학협동관
6. 구술분량: 07분 23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부산지역정책연구소2) 활동과 1995년 부산시장 선거

구술자 : (부산지역정책연구소) 공식적 출범은 사(4)월로 기억하지만 그 전부터 저는 움직였었던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기억에는 한 이(2)월 달 정도부터 연구소 준비를 위해, 출범 준비를 위해서 연구소를 진짜 청소부터 시작해서 집기도 갖추고 자료도 구하고, 또 세미나 프로그램도 만들고 기타 등등, 연구소를 초기 인제 기본 인프라를 갖춰가는, 또 셋업(set-up)해가는 작업들을 주로 했었던 것 같고. 그 무렵에 이제 노 대통령님을 만났고 나름대로 연구소를 잘 꾸려보겠다는 의지도 표명하고 (하셨습니다).

면담자 : 대통령님은 얼마나 자주 내려오셨습니까?

구술자 : 크게 이렇게 정기적으로 내려오시진 않았어요. 일이 있으시면 내려오시고 또 뜸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연구소 이후에는 부산을 나름대로 자주 내려오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에피소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구소 안에 조그만 숙소를 만들었어요. 숙소를 만들어서 대통령님께서 주무시기도 하고. 저도 새벽에 일찍 와서 이제 뭐 목욕탕을 다녀오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아침에 우동집에서 같이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식사할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나름대로 힘든 시기였지만 대통령님께서 나름대로 반전의 기회를 모색하는 그런 어떤 시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1) 1994년~1995년 재직.

2) 1994년 4월 15일 부산에서 개설한 정책연구소로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부산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각종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열어 지방자치선거의 교육기능을 수행했다. 1993년 9월 서울 여의도에 개설한 지방자치실무연구소와 연계해 정보교류와 공동연구를 실시하기도 했다. 한겨레신문, 1994.4.11 참고.

면담자 : 네, 그래서 지역정책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부산을 알아야 되니까 그죠?

구술자 : 일단 학습을 해야 됐기 때문에 부산의 이제 산업이라던지 부산의 이제 개발정책이라던지 특히 산업과 관련해서 특히 항만 관련해서 많이 학습을 했었고요.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풀어야 될 어젠더(agenda)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현안들이 뭔가에 대해서 쭉 고민을 했었고. 그러니까 주로 학습과 현안 부분에 대한 고민, 도출 이런 것들이 한 축을 이룬다고 이야기할 수 있구요.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교육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정치학교 같은 것들을 열어서 지역경제라던지, 지방자치법이라던지, 여러 가지 지방자치제도라던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강좌도 개설했고. 저도 이제 지역경제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그렇게 했고 여러 가지 발간물들, 신문 뉴스클리핑이라던지 기타 강의자료 같은 것도 또 발간을 하고 필요할 때 언론을 위한 이 나름대로 보도자료 같은 것도 준비했었고. 기억나는 거는 우리 연구소 오픈 기념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방대한 작업이었는데 분석이 아주 잘돼가지고 그때 언론에 많이 회자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방대한 작업이었어요, 어쨌든. 설문조사가 부산 전체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분야를 같이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실무연구소하고는 이제 서로 소통하면서 프로그램도 공유하고 필요하면 인적 교류도 하고 또 실제로 이제 지방자치선거가 있을 때는 이제 그 정치신인들에게 여러 가지 컨설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거전략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또 이제 서울의 협조를 받아서 지방자치실무연구소 멤버들이 내려오기도 하고 또 외부행사는 저희들이 같이 합류해서 같이 치르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서로 협력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지방정치학교도 마찬가지로 교류프로그램의 하나였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일단 진보연구소이면서 전문정책연구소로는 사실은 거의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구요. 물론 그전에 노동자를 위한 연대라던지 이런, 실제로 노동문제를 연구하거나 또 지원하는 쪽은 있었고 법률관련연구소가 있었던 거는 생각이 들지만 소위 진보적 관점에서 지역의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소는 거의 처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몇 회에 걸쳐서 특히 선거를 앞두고는 학교를 열었었고 또 거기서 학습했던 분들과 인적관계가 형성이 잘 되어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그 당시에 민주당을 통해서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나름대로 야쪽(야

권)에 있는 분들이 학습이라는 고리를 매개로 해서 서로 이렇게 좋은 관계가 형성되는 하나의 어떤 베이스캠프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선거<sup>3)</sup>를 치르면서 공약을 만들어 냈지만 너무 임박하게 선거(출마)가 결정이 되었고 그래서 전체 선거 공약이란 게 여러 분야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생각이 들고. 그러다보니까 소위 지역정책 내지는 지방정책에서의 진보담론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책 속에 용해되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덜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렇지만 어쨌든 뭐 특히 복지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 진보 쪽의 어떤 나름대로 어떤 정체성을 담아내려고 노력했던 거 같구요, 지역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어떤 지역균형발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논란을 하는 그런 테마는 없었던 거 같습니다. (연구소가) 구십사(94)년 초에 생겼을 때만해도 시장선거를 전혀 의식한 거는 아니었구요. 실제로, 결과적으로도 대통령님께서 시장선거를 출마하실려고 결정했던 게 두세 달 전이었거든요. 저는 차라리 오히려 뭐 한 육(6)개월 전쯤이나 타게팅(Targeting)을 했으면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아까 아쉬웠다고 말씀드린 지역정책에서 진보담론을 담아내는 문제라든지, 전체적인 실용성의 문제라든지, 실현가능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했을 텐데. 어쨌든 너무 임박해서 하는 바람에 거의 매일 날밤을 새다시피 하고. (연구소 출범이) 정치적인, 시장선거를 의도로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통령님께서 이제 큰 틀의 지역정치를 생각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하나의 샘플을 만든, 또 인제 정치적 고향이 부산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 구술자 주요이력

1958. 부산 출생

1993. 부산대학교 경제학 박사

1994. 부산지역정책연구소 기획실장

---

3)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말함.

- 1996.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2002.12 - 2003.02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자문위원
- 2004. 부산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 단장
- 2007.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교수
- 2012. - 경성대학교 산학단장(2012년 현재)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연구 활동에 매진하던 중 노무현 대통령이 1994년 설립한 부산지역정책연구소 기획실장으로 참여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연구소 재직기간이었던 1995년 부산시장 선거에도 참여해 정책 및 공약개발을 담당했다.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자문위원을 맡았고 2003년 전략산업기획단 단장으로 국책사업 평가 업무를 진행했다.